

7000억 손실은 일회성, 흑자전환 자신… ‘매각 불가설’ 반박

홈플러스, 위기설 진화 나서

현재 2개 기업과 인수협상 진행중
“작년 대규모손실, 퇴직금 등 영향
경쟁력과 무관, 영업의 흑자 전망”

홈플러스가 3분기 실적 부진과 7000억원대 누적 손실로 불거진 ‘매각 불가설’에 정면반박했다. 홈플러스는 16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인수·합병(M&A)과 회생절차가 마무리되면 막대한 비용 구조 개선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2개 기업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홈플러스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조 36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11.2% 감소한 롯데마트, 1.8% 줄어 든 이마트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세다. 7000억원대 누적 손실이 알려지며 한 언론 매체에선 인수자가 나타나도 운영



홈플러스 시흥점.

/손종욱 기자

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손실 대부분은 일회성”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은 통상임금 관례에 따른 일회성 퇴직금 600억원 등 일회성 비용 1100억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본질적인 경쟁력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단기간 내 흑자전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홈플러스는 M&A와 회생절차를 통한 ‘대규모 비용 절감’을 흑자전환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M&A가 제3자 신주인수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매각 대

금이 홈플러스로 유입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물론 연간 5500억원에 달했던 금융비용이 고금리 차입구조 조정 등으로 약 3300억원 이상 줄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를 연 1400억원가량 대폭 절감하고 임대료 조정이 불발된 일부 적자 점포를 폐점해 약 700억 원의 손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연간 5400억 원 규모의 비용 구조조정이 가능해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충분하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입장이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본업 경쟁력도 여전히 견재하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핵심 성장 동력인 ‘메가 푸드 마켓’ 리뉴얼 점포와 연 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부문이 최근 3년간(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유망한 유통기업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23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점포와 연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기업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현재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2개 업체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3억원, 116억원에 그치고 유통업 경험도 없는 만큼 실제 인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언급했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지도부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258일차가 된 오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G마켓, 알리와 연합… 11번가, 테크기업 전환

1세대 이커머스 ‘명암’

1세대 이커머스 업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G마켓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연합하며 대규모 투자를, 11번가는 SK플래닛에 인수되며 안정과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위메프는 11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넘기고 파산한 가운데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된 티몬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G마켓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322억원이나 늘어났다. 신세계그룹 편입 후에도 수익성 개선이 더디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파하겠다는 분위기다.

올해 초 알리바바·라자다 출신의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대표를 선임 수장으로 선임한 G마켓은 글로벌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제임스 장 대표 영입과 함께 G마켓의 글로벌 전략은 최근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와의 합작법인(JV) 설립으로 구체화됐다.

G마켓은 연합을 통해 개인화 추천 서비스와 해외 직구 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G마켓의 부활을 위해 당장 내년에만 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며, 이 중 1000억 원은 알리바바의 AI 기술을 이식하는 데 쓰인다. G마켓은 3년간 AI에만 3000억원을 투자해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2030년까지 거래액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황이다.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는 G마켓의 중국 매각설 등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세계가 경영 주도권을 확실히 쥔 상태에서 알리바바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최근 새롭게 대표로 선임된 G마켓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대표가 지마켓의 향후 전략 및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

/G마켓

**G마켓, 개인화 추천·해외직구 강화
내년 7000억 투입 경쟁력 키우기로
11번가, 누적 영업손실 45% 급감
데이터 결합 ‘AI기반 커머스’ 집중
티몬, 오아시스 마켓에 인수돼
손실 66% ↓ 영업재개는 ‘아직’**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G마켓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665만명 선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910만명에 달해 합칠 경우 1600만명에 달하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게 된다.

11번가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가량 줄이는 데 성공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 IPO(기업공개) 무산 이후 최근 SK플래닛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11번가는 ‘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MAU 약 765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SK플래닛이 보유한 OK캐시백, 시럽(Syrup) 등 방대한 데이터와 결합한 ‘AI 기반 커머스’ 시너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분기 역시 무리한 출혈 경쟁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으로 수익

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11번가 박현수 사장은 “앞으로도 수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실적 개선 흐름을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라며, “탄탄한 내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며 커머스 업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빚은 위메프는 이달 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11만명, 피해액은 4000억원이 넘어간다. ‘티메프’ 사태 전 체로 확장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티몬은 신선식품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아시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의 당기순손실은 9월 말 기준 851억원으로 집계돼 기존 2504억원 대비 약 66%가 급감했다. 하지만 이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재무 탕감의 결과일 뿐, 실제 영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결제망 복구 문제다. 당초 9월 사업 재개를 예고했으나, 카드사들이 결제 대행사(PG사)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손종욱 기자

정부 ‘환율 안정’ 가용수단 적극 활용

≫ 1면 ‘고환율·집값·물가…’서 계속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은 총재,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금 수준 이상의 환율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원화 약세’ 수입물가 4개월째 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개월래 최대 금리 인하면 자본 유출 등 ‘악영향’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여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까지 낮춘 뒤 7·8·10월 세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통화 완화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기 둔화와 함께 서울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 없이 연착륙’ 시키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뚜렷하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추가 인하 명분보다는 동결 명분이 더 컸다는 평가다.

지난달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다수 금통위원이 “환율 재상승으로 외환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 운용에서 외환 안정에 대한 고려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둔화를 이유로 0.25%p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신성환 위원조차 거

주자의 해외투자가 환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환율·집값 레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서도 한은의 손발을 묶고 있다. 10월 수입물가는 원화 약세 영향으로 9월 연속 상승해, 올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채권시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4일 오전장에서 연 2.944%까지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 상단을 뚫히는 흐름으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가격에서 지워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 여건 역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에 자본 유출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2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기대가 55% 수준으로 전망돼 한은이 선제적으로 완화 폭을 넓히기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성장 하방 리스크를 이유로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과 서울 부동산,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 추가 인하나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1년 이내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